

법무매거진

대법원 엘리트 총괄연구원들, 사직서 거둬들였지만... ‘김명수 리더십’ 오점 남겨



- 일부 대법관들 나서 총괄연구원들의 사직 만류
- 대법원 부장관사 등 사직 계속... '인사제도 실패 의미'

대법원 내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는 총괄 재판연구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려던 의사를 접고 사직서를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기시됐던 총괄 재판연구원들의 로펌행이 대법원의 적극적인 만류로 일 단락된 셈이다. 다만 총괄연구원들의 사표 제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고 법관들의 '탈 법원'이 계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상당한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소속 A총괄연구원(부장관사)은 지난달 말 사직을 철회했고, B총괄연구관은 전날(1월 31일) 법원에 남아 있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의 사직을 막기 위해 대법관 중 일부가 직접 나서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B 총괄연구관은 각각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과 또 다른 대형 로펌 행을 타진한 바 있다.

두 총괄연구관의 사직은 한동안 표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당사자들도 사직 의사를 꺾지 않고 버텼다. 법무법인 율촌에 이직하기로 확정지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냈던 A총괄연구관은 몇몇 대법관이 불러 사직을 만류하는 등 대법원이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반면 B총괄연구관은 A총괄연구관이 사직서를 거둬들인 이후에도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관사는 "김 대법원장이 A총괄연구관의 사표를 철회하면서 B총괄연구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총괄연구관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사건의 쟁점 정리와 법리 검토 등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법원의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만큼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일은 관



〈대법원 전경〉

행적으로 금기시돼왔다. 통상 1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한 뒤 나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난해 형사총괄연구관이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면서 금기를 깬다.

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연구원들과 고법 판사들의 이탈이 계속되자, 법관들 사이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끊이질 않는다. 법관인사 이원화는 고법 부장승진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를 이원화해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소속 부장판사 1명과 일부 재판연구원들이 대형 로펌 행을 확정했고, 고법 판사도 역대 최다인 15명이 사직하면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많다.

한 부장판사는 “인사 정책에 정답은 없지만, 현 제도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법관들의 사직이 나오면 안 된다.”며 ‘사직이 계속되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하지만 법원에 남아 있을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을 떠나는 이들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